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을 방문해 즉발집 상인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尹, 민생토론회 전국단위로 확대

민생토론회 직후 전통시장 방문 지역균형 발전 의지 이어질 듯

총선 앞두고 與 후보 지원하는 불법 관권·사전선거운동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부처별 업무 보고 형식을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바꾼 뒤, 민생토론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고 있다.

연초 수도권에서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비수도권 지역의 민심도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뒤 부산, 대전, 울산, 창원 등 모두 비수도권에서 최근 개최됐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 직후 지역 전통시장까지 직접 방문하며 바닥 민심을 챙기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4일을 처음으로 시작된 민생토론회는 지난 22일까지 총 열네 차례

에 걸쳐 진행됐다. 최근 네 차례를 제외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열 차례의 민생토론회가 진행됐다.

주제도 다양하다. 경제정책 방향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반도체 산업, 교통격차 해소, 일자리, 디지털, 국민 안전, 돌봄, 의료개혁, 미디어 정책, 저출산 대책, 에너지 정책 등이 다뤄졌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현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 간 칸막이 철폐 지시 등 문제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정부를 앞세운 만큼 민생 성과를 빠르게 거둬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개혁과 더불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냄에 따라 지역별 민생토론회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제22대 총선을 40여일을 앞두고 전국 곳곳을 도는 윤 대통령의 행보에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사실상 전국

순회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는 비판도 나왔다.

권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최근 지역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전국을 돌며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말이 좋아 민생토론회지, 정부여당의 총선 공약을 홍보하는 불법적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의 현장"이라며 "윤 대통령은 본인을 여당 선대위원장으로, 정부와 공무원은 여당의 선거대책위원회 정도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당장 민생토론회를 빙자한 불법적인 관권선거, 사전선거운동을 중단하라"며 "선거 중립의지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히고 국민과 법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metroseoul.co.kr

野, 내부분열 단속... "민주적 소통과정"

리서치 DNA 이용한 경선조사 안 해 단수공천 17곳·2인 경선 2곳 발표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25일 7차 공천심사를 발표하며 비이재명계 의원은 2인 경선을 치르게 했다.

민주당은 25일 내부 분열 단속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은 경선 조사업체로 선정된 리서치DNA(구 한 국민리서치)를 이용해 경선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당은 "리서치DNA는 조사에 문제는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에 경선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당에 알려왔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비명계 지역구에서 현역 의원을 제외한 적합도 조사를 돌렸다고 의심을 받는 업체이다.

이를 인지한 비명계 의원들은 의원 총회 등에서 당 지도부에 이에 대해 항의했고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논란이 있는 업체는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로 당 지도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가 자신과 대치 상황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자 입장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선정적인 제목으로 당의 공천에 마치 큰 갈등과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강병원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은평구에 출마한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이 경선을

치르게 되자, 당 지도부에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한편,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단수 공천 17곳과, 2인 경선 4곳을 발표하며 공천 심사에 속도를 냈다. 2인 경선은 광주 서구갑에 송갑석 의원과 조인철 전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 대전 대덕구에 박정현 지명직 최고위원과 박영순 의원, 경기 고양시정에 김영환 전 도의원과 이용우 의원, 충북 청주시흥덕구에 도종환 의원과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이 맞붙는다.

송 의원은 현역 하위평가 20%에 포함됐고 박 의원은 10%에 포함됐다. 이용우 의원과 도종환 의원은 비명계 의원들과 함께 의원모임 '원칙과상식'의 탈당 전 이 대표에게 통합 행보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낸 적 있다.

반면, 선출직 최고위원인 정청래(서울 마포을)·서영교(서울 중랑을) 의원은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인천에선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천 계양갑)가 단수를 받았고 수원 갑-을·병에선 각각 김승원·백해련·김영진 의원이 본선에 진출했다. 경기 안양 만안구·동안 갑·동안을은 각각 강득구·민병덕·이재정 의원이 공천을 받고 경기 성남시수정구에선 김태년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다. 이외에 경기 지역에선 한준호(고양을), 김용민(남양주병), 문정복(시흥갑), 권철승(화성병) 의원이 경선 없이 공천을 받았다.

당의 정책위의장인 이개호 의원은 전남 담양군합평면공영광군장성군에서, 제주 제주시을과 서귀포시에선 각각 현역인 김한규 의원과 위성곤 의원이 재신임을 받았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정우택·박덕흠 등 '지역구' 현역 생환

국민의힘, 19개 지역 1차 경선 비례대표 의원들과 희비 교차

국민의힘이 25일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울 양천 갑 등 19개 지역에서 실시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경선 결과 발표 지역은 총 19곳으로 ▲서울 6곳 ▲경기 3곳 ▲인천 2곳 ▲충북 5곳 ▲충남 2곳 ▲제주 1곳 등이다. 해당 지역은 모두 1권역(서울 일부·인천·경기·호남·충청·제주)으로 당원 20%, 일반국민 80% 여론조사를 반영해 결과를 결정한다. 청년·정치신인에는 가점, 징계·탈당 등에는 감점을 적용했다.

이번 경선 결과 현역의원은 모두 생환했다. '돈봉투 의혹'을 받았던 정우택 의원은 충북 청주상당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맞붙은 결과 공천이 확정됐다. 또 충남 보령서천이 지역구인 장동혁 사무총장,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은 모두 경선에 승리했다.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경선에서 전·현직의원에게 패했다. 서울 동대문 갑에 나선 여명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김영우 전 의원과의 경선에서 탈락했다. 충북 제천단양 엄태영 의원과 최지

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 충북 충주 이종배 의원과 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은 경선에서 엄태영·이종배 의원 등이 승리했다.

이번 경선 결과를 살펴보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희비가 교차된 것을 알 수 있다.

경기 여주·양평에서는 지난해 의원직을 상실했던 김선교 전 의원이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을 꺾고 공천이 확정됐다. 김 전 의원은 '불법 후원금 모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5월 대법원 판결에서 본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회계책임자가 벌금 1000만원형이 확정되면서 의원직이 상실된 바 있다.

현 지도부 소속 영입인재와 전·현직 지도부가 3차 경선을 벌인 서울 양천갑은 구자룡 비상대책위원과 조수진 의원(비례대표)이 결선을 다시 치른다. 정미경 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이외에도 서울 성북갑(이종철), 서울 성북을(이상규), 서울 양천을(오경훈), 서울 금천(강성만), 인천 남동을(신재경), 인천 부평갑(유제홍), 경기 의정부을(이형섭), 충북 증평진천음성(경대수), 충남 아산을(전만권), 제주 서귀포(고기철) 등도 경선 결과 후보가 확정됐다. 경기 광주을은 조역동·황명주 예비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서예진 기자

쌍특검법 재표결, 본회의서 부결 전망

與 공천 탈락자 이탈 노렸지만 17명 이상 반란표 나오기 어려워

2월 마지막 임시국회 본회의가 이번 주에 예정된 가운데, 여야는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추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문제로 맞붙을 예정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지역구 의원이 나오지 않으면서 쌍특검법은 부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쌍특검법 재의결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할 생각"이라며 "추가조작 범죄에 대통령 부인이 연루되고, 사법 정의를 팔아 사적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의 중대성에 비추어 봤을 때 진상규명과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쌍특검법은 앞서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의결을 해야 한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은 재적의

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즉, 쌍특검법이 재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297명)이 모두 출석했을 경우 198표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다만 헌법은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한 재표결 시한을 정해두지 않았다. 이전에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여야 합의에 따라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관례상 바로 다음 본회의에 올린 셈이다.

실제로 앞서 거부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3법 개정안·노란봉투법 개정안·양곡관리법 개정안·간호법 개정안 등은 재의요구 시점부터 최장 2주 이내 재의결에 부쳐졌다.

그러나 쌍특검법은 50일이 넘게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됐던 지난달 9일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반면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최대한 미뤘다.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공천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을 때 표결을 해야, 공천에서 탈락한 이들이 이탈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쌍특검법이 통과하려면 필요한의석

수(198석)를 채우려면 국민의힘과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중 이탈표가 최소 17표여야 한다. 구속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하면 민주당·녹색정의당·개혁신당·새진보연합·새로운미래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치면 181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17명 이상의 반란표가 나오기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공천 과정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이 컷오프됐다. 반발의 여파가 큰 지역구 의원은 단 한 명도 컷오프되지 않았다. 게다가 민주당은 최근 당내 공천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라 '표 단속'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쌍특검법 재표결을 꺼내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물론 재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표 향방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가진 몇몇 의원들이 당 기조에서 벗어나 표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쌍특검법이 부결되면 '김건희 리스크'를 전면에 내세워 여론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서예진 기자 syj@